

공산주의와 기독교

청소년 토론용 에세이

개혁주의 관점으로 오늘의 사건들을 직접 확인하며 배우는, 청소년이 직접 읽는 책

지은이: 호박전도사

차례

여는 글 — 정치에 관심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1부. 세상을 보는 눈 — 왜 "믿음 체계"부터 알아야 하나

1장.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는다 —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2장. 마르크스는 무엇을 꿈꿨나 —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세상"이라는 약속

3장. 그 약속은 왜 항상 독재로 끝났나 — 국가가 신의 자리에 앉을 때

4장. 사람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5장. 사유재산, 노동, 자유 — 성경이 말하는 소유와 청지기직

6장. 가정을 향한 공격 — 공산당 선언의 가족관과 성경적 가정

2부. 역사가 증언하는 것

7장. 소련 —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감옥을 지은 나라

8장. 북한 — 국경 너머 가장 가까운 증거

9장. 감시사회의 조건 —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혹은 노예로 만드는가

3부. 오늘, 우리 곁의 위장된 형태들

10장. 내 지갑 속의 감시자? — CBDC와 화폐의 자유

11장. 얼굴이 곧 신분증이 되는 사회 — 스마트시티와 안면인식

12장. 우리 집 안의 눈 — 로봇청소기 속 데이터는 어디로 가나

13장. 지역 뉴스는 왜 갑자기 두 개 언어로 나왔을까 — 목포MBC
자막 논란

14장. 섬이 팔리고 있다 — 제주 부동산과 아직 못 찾은 15명

15장. 투표함을 흔드는 손 — 선거 시스템을 노리는 외부의 공작

16장. "부정선거였다" — 한국과 미국, 확인해보니

17장. 호주는 왜 등을 돌렸나 — 친중에서 반중으로

18장. 항구를 빌려주고 나라를 내주다 —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의
선례

19장. 국경 너머, 지금 이 순간 — 신장 위구르

20장. 몸을 파는 마지막 시장 — 강제 장기적출

4부.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나

21장.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는 법 — 이 책이 실제로 쓴
방법 그대로

22장. "누가 말했는지"보다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지" 물어라

23장. 무관심이 아니라 분별 — 미워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법

24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 투표 못 하는 나이에든 시민으로
사는 법

맺는 글 — 다시, 그 문장으로

저자의 말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는 글 — 정치에 관심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영어 단어 "idiot(바보)"의 어원을 아는가? 그리스어 ἰδιωτής(이디오테스, "사적인 개인")에서 왔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은 성인 시민 전원에게 공적 업무 참여 의무를 지웠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몸에 낙인을 찍는 일도 있었다. "이디오테스"는 바로 이 공적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 당시엔 "바보"라는 경멸적 의미는 아니었고, "공직자·전문가"에 대비되는 "일반인"이라는 비교적 중립적인 뜻이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넘어오며, 결국 지금의 "바보"라는 뜻으로 굳어졌다. 공적 삶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대하는 시선이, 시대를 넘어 이 단어 하나에 새겨진 셈이다.

또 하나, 흔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말로 알려진 문장이 있다 —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소크라테스의 직접 발언도, 플라톤 원문 그대로의 인용도 아니다. 플라톤 『국가』 1권 347c의 한 구절 — "통치를 거부한 현자들이 받는 벌은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통치당하는 것" — 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이 문장의 주어는 "무관심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통치를 거부한 현자"였다. 20세기 들어 지금 형태로 재구성되어 널리 퍼졌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는 글로 삼은 이유가 있다. **유명한 단어도, 유명한 명언도 알고 보면 원래 뜻과 지금 통용되는 뜻이 다르다.** 이 책 전체가 하려는 일이 바로 이거다 — 그럴듯하게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고, 원전을 확인하고, 근거를 따져보는 것. 그리고 두 이야기가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 공적 삶을 외면하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운다.

이 책은 이렇게 구성돼 있다.

- **1부**는 먼저 알아야 할 신학적 기초다. "공산주의가 왜 우상숭배인가"를 성경적으로 짚는다.
- **2부**는 역사가 실제로 증언하는 것들이다.
- **3부**는 2026년 8월 현재, 우리 곁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건들이다 — CBDC부터 신장 위구르까지.
- **4부**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알아둘 게 있다. 이 책의 목적은 특정 정당이나 국가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다가가야 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짓말**이다.

1부. 세상을 보는 눈 — 왜 "믿음 체계"부터 알아야 하나

"공산주의는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소련은 무너졌고, 냉전도 끝났다. 그런데 정작 살다 보면 이런 순간과 마주친다 —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친구의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하나님 없이도 다들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 1부는 이 순간들에 답하기 위한 기초 공사다.

1장.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믿는다 —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보통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훨씬 넓고, 훨씬 가깝다.



그림: Nicolas Poussin,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5)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불렀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모양이 아니라 **자리**다.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에 돈, 인기, 국가, 이념 같은 다른 무언가를 앉히는 것 — 그게 우상숭배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산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선택한다고 예배 자체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뀔 뿐이다.

공산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신학이다.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한 자리에, 다른 무언가 — 역사의 필연적 법칙, 계급 없는 유토피아, 그걸 이뤄줄 당(黨)과 지도자 — 를 세워 놓는다.

한 문장으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기대를 거는지 — 그게 내가 진짜로 예배하는 대상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1.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감정·기대를 쓰고 있을까?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진 않을까?

2장. 마르크스는 무엇을 꿈꿨나 — "하나님 없이도 완벽한 세상"이라는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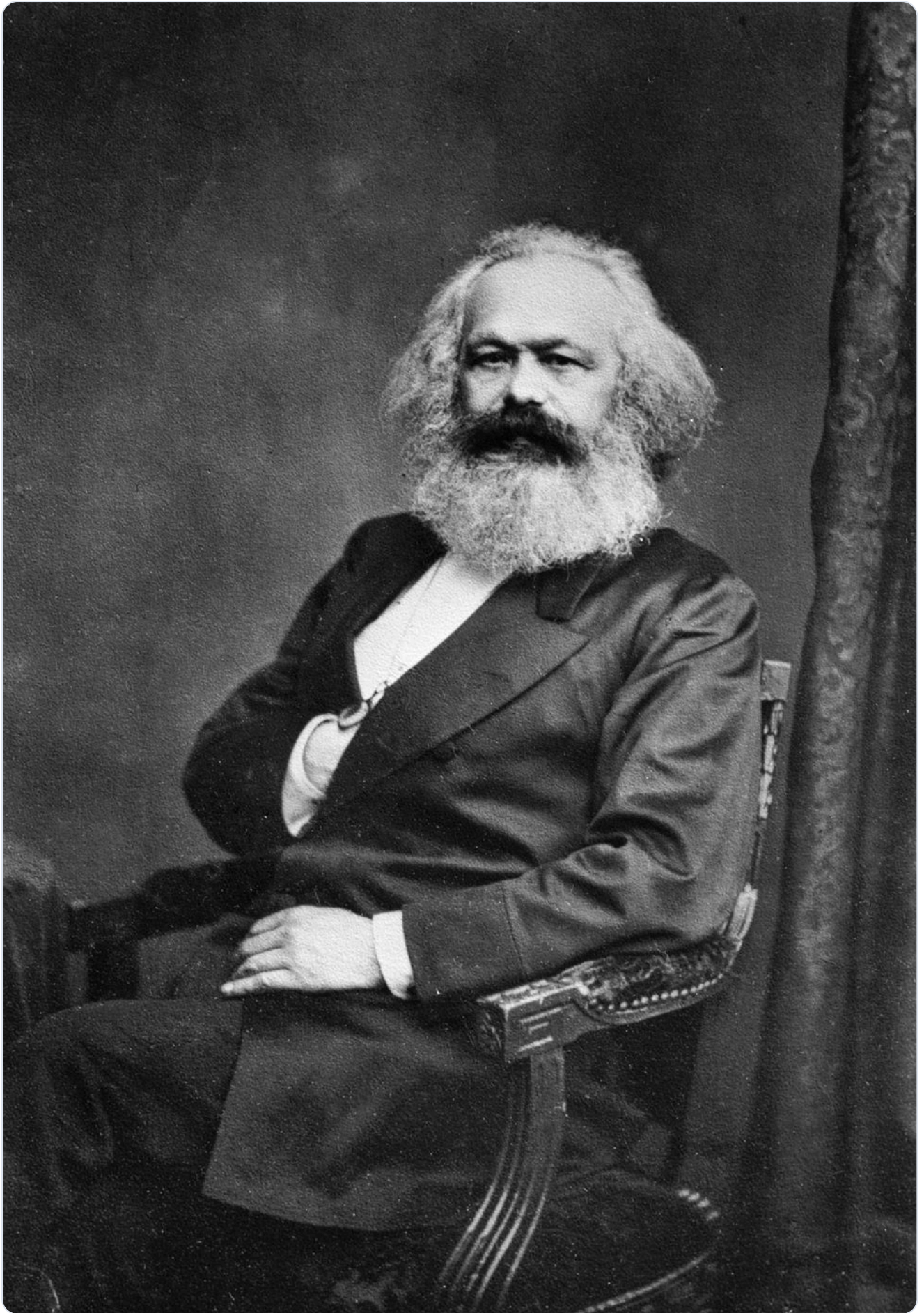


사진: John Jabez Edwin Mayall,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칼 마르크스는 1844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흔히 오해하듯 종교를 마약처럼 매도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의 진짜 주장은 더 근본적이다 —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종교라는 "환상의 위로"를 만들어냈으니, **현실 자체를 바꾸면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완결된 세계관이다.

- 창조 대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물질에서 저절로 생겨났다)
- 타락 대신 계급 (고통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사유재산과 계급 구조다)
- 구원 대신 혁명 (인간을 구원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 하나님 나라 대신 유토피아 (역사의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계급 없는 사회다)

기독교의 뼈대를 빌려온 세속화된 종말론

기독교	마르크스주의
창조	물질(유물론)
타락	계급(사유재산)
구속(십자가)	혁명(프롤레타리아)
하나님 나라(재림)	유토피아(계급없는사회)

같은 틀, 다른 내용물 —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웠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의 뼈대(창조-타락-구속-완성)를 그대로 빌려와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물질과 역사와 당을 채운 **세속화된 종말론**이다. 20세기 소련과 마오쩌둥 치하 중국이 실제로 "국가 무신론"을 법으로 강제한 건 우연이 아니라, 이 세계관이 논리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다.

한 문장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누군가 하나님 자리에 서야 했다.

함께 생각해보기

1. "현실을 바꾸면 종교가 필요 없어진다"는 마르크스의 말에서, 옳리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성경적으로 반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3장. 그 약속은 왜 항상 독재로 끝났나 — 국가가 신의 자리에 앉을 때



사진: Bronks,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성경은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인정한다(로마서 13:1-7). 하지만 국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는 심판자이지 창조주가 아니고, 정의를 집행하는 종이 지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신이 아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국가(또는 당)는 이 경계를 넘어선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까지 국가가 정의한다. 절대적 권위는 하나뿐이어야 하니, 하나님과 전능한 국가는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는 예외 없이 종교, 특히 유일신 신앙과 충돌해왔다.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하나님)에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체주의 체제에는 용납될 수 없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한 문장으로: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나라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위험해지기 시작한다.

함께 생각해보기

1. 국가가 "이건 무조건 옳다, 의심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과, 개인이 자기 신념대로 자유롭게 판단하는 순간 —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4장. 사람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림: Michelangelo,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공산주의 인간론의 핵심은 인간을 **경제적 위치(계급)**로 정의하는 것이다. 부르주아나 프롤레타리아나, 착취하는 자나 착취당하는 자나 — 이 이분법이 인간을 이해하는 최종 틀이 된다. 이 틀 안에서 한 사람의 존엄은 어떤 계급에 속했느냐에 따라 조건부로

결정된다. 실제로 20세기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계급의 적"으로 분류된 지주, 자영업자, 종교인, 지식인들이 재판 없이 숙청당한 사례가 반복된 건 이 인간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성경은 정반대의 출발점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인간의 존엄은 계급, 국적, 재산, 생산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도 더 큰 목적(혁명, 국가, 역사)을 위한 수단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한 문장으로: 내가 소중한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거나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저 사람은 어느 편이냐"로 사람을 나누고 싶어지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의 범주로 축소하고 있을까?

5장. 사유재산, 노동, 자유 — 성경이 말하는 소유와 청지기직

「공산당 선언」의 핵심 강령 중 하나는 사유재산의 폐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문에서 이렇게 썼다 — "공산주의자의 이론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사유재산의 폐지."

성경은 소유를 인간의 탐욕의 산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소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의 근거다.

-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출애굽기 20:15)는 애초에 정당한 소유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한다.
-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데살로니가후서 3:10)는 노동과 그 결과물 사이의 정당한 연결을 인정한다.
- 희년법(레위기 25장)은 재산을 아예 없애는 대신, 소수에게 영구히 독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회복시킨다.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탐욕과 독점을 다른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강제로 재산을 몰수해 재분배하는 것과, 자원해서 이웃과 나누는 건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본질이 다르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통용했던 사도행전 4장 장면(4:32-35)은 **자발적 사랑의 결과**였지, 국가 권력의 강제 몰수가 아니었다. 자유가 없는 나눔은 나눔이 아니라 몰수다.

한 문장으로: 내가 가진 걸 스스로 나누는 것과, 누군가 억지로 빼앗아 나눠주는 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억지로는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셨다.

함께 생각해보기

1.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6장. 가정을 향한 공격 — 공산당 선언의 가족관과 성경적 가정



사진: Ryk Neethling, Wikimedia Commons (CC BY 2.0)

덜 알려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다. 「공산당 선언」은 사유재산 폐지와 함께 전통적 가족 형태 해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원문은 이렇게 쓴다 — "현대의 부르주아적 가족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그것은 자본, 즉 사적인 영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녀 양육을 사적 영역에서 공동체(국가)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우연한 부산물이 아니다. 가정은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 2:24)이며, 개인이 국가 이념에 앞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가치관을 물려받는 통로다. 전체주의 체제가 개개인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국가보다 먼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 — 가정 — 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실제로 20세기 공산주의 체제들은 국가 주도 집단 보육, 자녀의 부모 밀고 장려, 학교를 통한 이념 주입으로 가정의 우선적 권위를 잠식하려 했다.

성경적 가정은 이와 정반대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7)

한 문장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건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떤 좋은 제도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함께 생각해보기

1.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국가나 기관, 혹은 스마트폰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을까? 왜 그럴 수 있을까?

2부. 역사가 증언하는 것

이 부의 목적은 특정 국가나 민족을 미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념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돕기 위함이다.

7장. 소련 —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감옥을 지은 나라



사진: Pavel Kazachkov, Wikimedia Commons (CC BY 2.0)

혁명 이후 소련 정부는 종교를 국가가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교회 재산은 몰수됐고, 많은 성직자와 신자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당했다. 1936년 소련 헌법은 "종교의식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명시했다 — 사실상 국가가 무신론 선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공개적인 신앙 활동이 위험해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교회(카타콤 교회)를 통해 신앙을 이어갔다.

공산주의 체제가 낳은 인명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도 방법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공산주의 흑서』(1997)가 촉발한 이른바 "흑서논쟁"에서 학자마다 추산이 크게 갈린다. 정확한 숫자를 단정하기보다, "역사학계에서도 논쟁 중인 규모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게 가장 정직한 서술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억압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 국가들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난 건, 국가가 아무리 강력해도 사람의 마음속 신앙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준다.

함께 생각해보기

1. 국가가 "이 종교의식은 허용하지만 이 선전은 허용한다"는 식으로 신앙을 관리하려 할 때, 그게 진짜 자유일까?

8장. 북한 — 국경 너머 가장 가까운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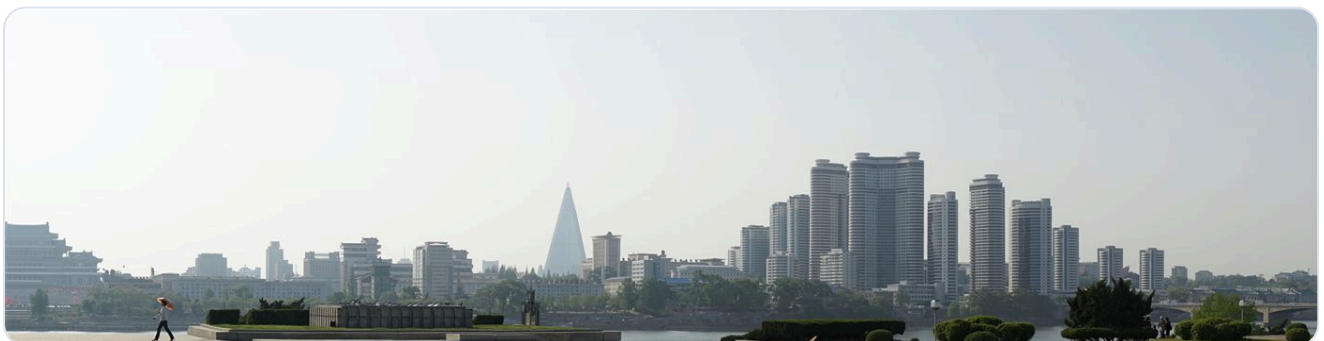


사진: 동경의 에피플라이,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북한은 오늘날에도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가 발표하는 세계 박해 국가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에 오르는 나라다. 오픈도어즈(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26」 기준, 북한은 97점으로 1위(2위 소말리아 94점, 3위 예멘 93점)이고, 전 세계 박해 인구는 약 3억 8,887만 명으로 집계된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몰래 예배를 드리다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례들이 탈북민 증언을 통해 계속 알려지고 있다.

이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 이건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힘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함께 생각해보기

1. 국경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또래 친구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9장. 감시사회의 조건 —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혹은 노예로 만드는가



사진: StockyPics, Wikimedia Commons (CC0)

공산주의 체제의 공통된 특징 하나는, 국가가 개인의 생각과 말,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웃이 이웃을, 자녀가 부모를 밀고하도록 장려된 사례들은 "완전한 평등 사회"라는 약속이 실제로는 "누구도 안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사회"로 귀결됐음을 보여준다.

자유는 추상적인 정치 구호가 아니다. 자유는 "내가 믿는 걸 말할 수 있는가", "가족과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가", "국가의 동의 없이도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매우 구체적인 질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1)

이 자유는 죄와 억압으로부터의 근본적 해방이며, 이 정신은 인간 사회의 모든 강제적 통제에 대한 저항의 뿌리가 되어 왔다. 그리고 이 감시의 문제는 3부에서 살펴볼 것처럼, 옛날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 — 오늘날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함께 생각해보기

1. "누가 내 대화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 이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 당연함은 어디서 왔을까?

3부. 오늘, 우리 곁의 위장된 형태들

지금까지 이상송배가 무엇인지, 마르크스가 무엇을 꿈꿨는지, 소련과 북한이 그 꿈을 어떻게 감옥으로 바꿨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자. **그 이야기는 정말 "옛날이야기"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곁에서도 벌어지고 있을까?**

이번 3부는 2026년 8월 현재, 실제로 확인된 사건들만 다룬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사실도 있고, 과장도 있고, 아예 조작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씩 직접 검색하고, 원문 기사를 확인하고, 근거를 못 찾은 건 못 찾았다고 솔직히 적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태도다 — 무섭다고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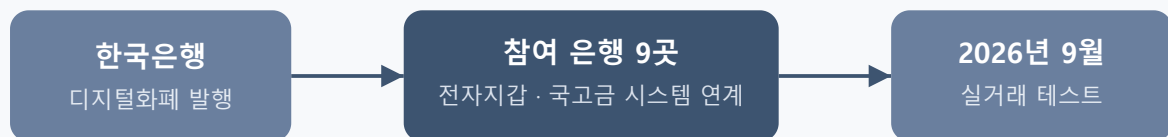
10장. 내 지갑 속의 감시자? — CBDC와 화폐의 자유

한국은행이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실험하고 있다. 9개 은행이 참여해서 2026년 9월부터 실거래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직접 발표한 사실이다.



사진: Neoalpha, Wikimedia Commons (CC0)

프로젝트 한강 — 한국은행 CBDC 2단계



사실 확인

- ✓ 실제 진행 중인 통화 인프라 사업 (미국 연준 등 여러 나라도 CBDC 연구 중)
- ✓ 감시·프라이버시 우려는 전 세계 학자·시민단체가 실제로 제기하는 정당한 비판
- ✗ "국가를 공산화하려는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해석 — 구분해서 볼 것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걸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시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하나를 구분해야 한다. CBDC 자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 미국 연준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연구·추진 중인 통화 인프라 사업이다. 다만 "내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국가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감시·프라이버시 우려는 전 세계 경제학자와 시민단체가 실제로 제기하는 정당한 질문이다. **사실(CBDC가 진행 중이다)과 해석("공산화 시도다")은 다른 층위에 있다** — 이 둘을 섞으면 진짜 논의해야 할 질문(내 금융정보는 누가, 어떻게 보게 될까?)을 놓치게 된다.

함께 생각해보기

1.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돈이 디지털 기록으로만 남는다면, 무엇이 편해지고 무엇이 위험해질까?
2.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과 "이미 위험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11장. 얼굴이 곧 신분증이 되는 사회 — 스마트시티와 안면인식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인식을 요구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범죄 예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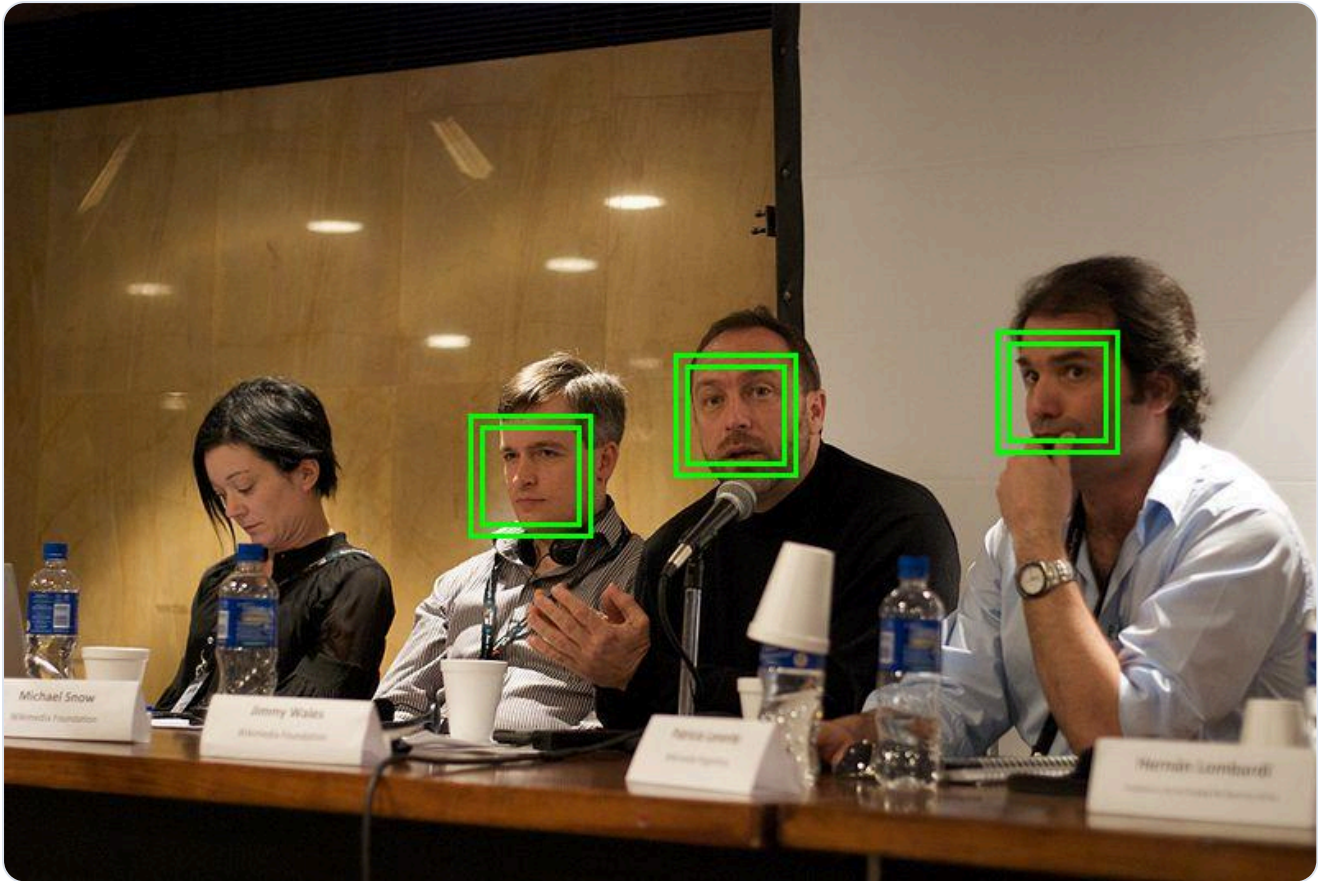


사진: Beatrice Murch, 편집 Sylenius, Wikimedia Commons (CC BY)

휴대폰 개통, 얼굴을 등록하다

시범 기간
이통 3사 도입

2026년 3월
정식 시행

왜 논란이 될까?

중국도 처음엔 "범죄예방" 명분으로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도입했지만, 이후 감시 체계가 계속 확대되며 통제사회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전례가 있음.

토스뱅크도 계좌개설·고액이체·이상거래마다 반복 요구 — 문서상 이유는 금융실명법(계좌개설)과 부정사용 방지(보안), 2024년 인증오류 불만도 실제 있었음

→ 의심은 자연스럽지만, "확인 없는 결론"과 "확인 후 판단"은 다른 길.

그런데 이 소식이 논란이 된 이유가 있다. 중국도 처음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도입할 때 똑같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후 이 시스템이 점점 확대되면서 개인을 감시하는 통제사회로 이어졌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중국이 그랬으니 한국도 똑같이 된다"는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같은 도구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조심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합리적 경계심에 가깝다. 보이스피싱을 막고 싶은 마음과, 내 얼굴 정보가 어디까지 쓰일지 걱정하는 마음 — 둘 다 진짜다.

휴대폰 개통만이 아니다.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를 써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일이 있다 — 계좌를 새로 만들 때는 물론이고, 큰돈을 이체할 때(1회 1,000만 원 초과 또는 하루 5,000만 원 초과)나 평소와 다른 이상 거래가 감지될 때마다 앱이 다시 얼굴을 비춰보라고 요구한다. 문서로 확인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 계좌 개설 시에는 금융실명법이 요구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이고, 고액이체·이상거래 시에는 카드 도용이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보안 절차다. 실제로 2024년 2월에는 이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잦아 "얼굴·신분증 인식이 안 된다"는 이용자 불만이 쏟아진 적도 있다 — 다만 이걸 누군가 몰래 감시하려 한 사건이 아니라, 인증 기술의 오류율과 처리 속도가 문제였던 사건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다. "왜 자꾸 내 얼굴을 확인하지?"라는 의문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다만 그 의문을 풀 때, "이유가 궁금하다 → 확인한다 → 실제 이유(법·보안)와 실제 문제(기술 오류)를 정확히 안다"는 순서를 거치는 것과, "의심스럽다 → 확인 없이 결론짓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다. 앞의 길로 가야 진짜 물어야 할 질문 — 얼굴 정보가 얼마나 오래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쓰이고 있는가 — 에 도달할 수 있다.

함께 생각해보기

1. "편리함을 위해 내 정보를 내놓는다"는 선택을 나는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2. 지금 당장은 문제없어 보이는 제도가 나중에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미리 점검할 수 있을까?
3. "의심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확인으로 이어가는 것과 결론으로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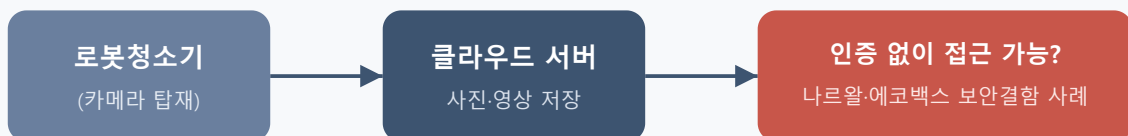
12장. 우리 집 안의 눈 — 로봇청소기 속 데이터는 어디로 가나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의 70%는 중국 브랜드다. 그런데 나르왈, 에코백스 같은 일부 제품에서 실제로 보안 결함이 발견됐다 —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제3자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우리 집 사진과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 Jirka Matousek, Wikimedia Commons (CC BY 2.0)

우리 집 안의 눈, 그 사진은 어디로 갈까?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70%가 중국 브랜드

로보락: 논란 후 "한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AWS 서버에 저장"이라 해명
 드리미: 싱가포르 서버였던 한국 사용자 데이터를 국내로 이전 (중국 제조사 첫 사례)
 → 실제로 있었던 사건. 편의성과 사생활 사이의 진짜 트레이드오프.

논란이 커지자 로보락은 "한국 이용자 데이터는 미국 AWS 서버에 저장된다"고 해명했고, 드리미는 아예 싱가포르에 있던 한국 사용자 데이터 서버를 국내로 옮겼다 — 중국 제조사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건 "중국 정부가 우리 집을 감시한다"는 확정된 음모가 아니라, **카메라가 달린 기기를 집 안에 들일 때 그 데이터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국적을 떠나 어떤 제품이든 카메라·마이크가 달려 있으면 똑같이 물어야 할 질문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우리 집에 카메라가 달린 기기(로봇청소기, 스마트 스피커, CCTV)가 몇 개나 있을까? 그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 한 번이라도 확인해본 적 있을까?

13장. 지역 뉴스는 왜 갑자기 두 개 언어로 나왔을까 — 목포MBC 자막 논란

2025년 5월 19일부터 목포MBC 유튜브 뉴스 코너에 중국어·베트남어 자막이 붙기 시작했다. MBC는 "중국인 유학생, 베트남 결혼이주민 등 다문화 이웃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BS105,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목포 거주 외국인, 국적별 비교 (2024.12)

베트남		자막 ✓
인도네시아	518명	자막 ✗
중국	369명	자막 ✓

목포MBC, 2025년 5월 19일부터 유튜브 뉴스에 중국어·베트남어 자막 도입

MBC 설명: "다문화 이웃에게 재난·행정·생활정보를 언어장벽 없이 제공"

진짜 질문: 중국인보다 훨씬 많은 인도네시아인은 왜 빠졌을까?

— "공산당 자막"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 있는 형평성 문제.

댓글창에는 "중공 방송이나"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더 흥미로운 질문이 나온다. 2024년 12월 기준 목포에 사는 외국인 중 베트남인이 2,012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인이 518명, 중국인은 369명으로 오히려 가장 적다. **그런데 자막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만 제공되고, 더 많이 사는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자막은 없었다.** "공산주의 침투"라는 감정적인 프레임보다, "왜 하필 이 두 언어만 골랐을까"라는 형평성 질문이 훨씬 정확하고 훨씬 힘 있는 질문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1.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감정과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짚어내는 것은 왜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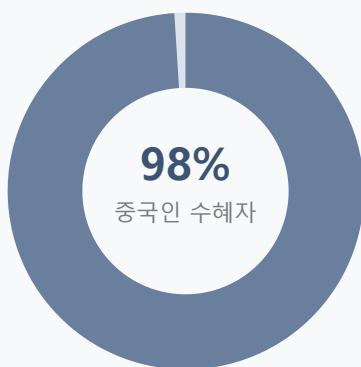
14장. 섬이 팔리고 있다 — 제주 부동산과 아직 못 찾은 15명

제주에는 일정 금액(현재 10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 이 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1,915세대 중 1,875세대, 즉 98%가 중국인이었다. 투자 금액은 1조 2,616억 원이 넘는다. 이건 한국 언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예일대 국제법저널 같은 해외 매체·학술지도 10년 넘게 똑같이 다뤄온,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진: Kristoferb,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섬이 팔리고 있다 — 제주 투자이민 12년



2010~2022년 투자이민 1,915세대 중 1,875세대
1조 2,616억 원, 대부분 콘도 등 숙박시설 투자

아직 못 찾은 15명

성인 실종신고 3년 7개월간

2,914건

이 중 15명 미발견

확인된 사실 1건:

장미란씨 사건 담당 경찰,
신고 허위종결·기록삭제로
직무유기 입건 (2026.8.14)

※ 2,914건 전체가 은폐된 것은 아님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3년 7개월간 성인 실종신고가 2,914건 접수됐고, 이 중 15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한 사건(장미란씨 실종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입건됐다. **이 두 가지(부동산 매입, 실종자 미해결)는 각각 사실이지만, 이 둘을 곧바로 "실종자가 중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 있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붙일 근거는 아직 없다.** 근거 없는 두 사실을 이어붙이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지만, 그건 소설이지 사실이 아니다.

함께 생각해보기

1. 두 가지 사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서로 원인과 결과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15장. 투표함을 흔드는 손 — 선거 시스템을 노리는 외부의 공작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회에서 밝힌 사실이다. 중국 선전기관이 한국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38개를 운영한 것이 2023년 11월 적발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이 중국발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개표 인력 중에 중국인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인정했다.



그림: 쿠모야,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투표함을 흔드는 손 — 국정원이 직접 밝힌 3가지

음모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회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

1

가짜 언론사 웹사이트 38개

중국 선전기관이 한국 언론사를 사칭 (2023.11 적발)

2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

중국발 해킹에 취약하다는 점을 국정원이 확인

3

개표 인력 중 중국인 포함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직접 인정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 됨)

미국 헤리티지재단, 스텐슨센터 같은 서구 싱크탱크도 중국의 대한민국 영향력 공작을 실제로 다루고 있다. 이건 확실한 근거로 쓸 수 있는 사례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 "중국 정부의 영향력 공작이 실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개인(예: 중국 정치인 왕후닝)이 이 모든 걸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은 다르다. 후자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실체가 있는 위협을 다룰 때일수록, 근거 없는 부분까지 끼워 넣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위협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한국만이 아니다 — 대만도, 동남아시아도

이게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대만**은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훨씬 크게 겪는다. 대만 국가안보국(NSA) 집계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SNS상 가짜 계정이 60%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허위정보 사례가 200만 건 넘게 확인됐다. 최근에는 AI로 특정 인물을 흉내 내거나 그럴듯한 가짜 콘텐츠를 만들어 퍼뜨리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외신(로이터, Foreign Policy, CFR 등)이 보도하고 있다. 대만의 지방선거는 아예 "중국이 새 수법을 처음 시험해보는 실험장"으로 불릴 정도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다. 뒤에 나올 18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캄보디아의 항구를 군사 거점화하려는 움직임, 남중국해를 둘러싼 압박, 메콩강 상류 댐을 통한 하류국 영향력 행사 등 —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패턴은 같다. 경제적 지원이나 투자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점점 그 나라의 자율적 결정권을 좁혀가는 것.

한국·대만·동남아시아를 나란히 놓고 보면 뚜렷해지는 게 있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한 음모론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동시에 겪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것. 그리고 이 패턴의 밑바닥에는 이 책 1부에서 다룬 바로 그 세계관이 있다 — 국가(또는 당)가 개인과 이웃 나라의 자율성보다 우위에 서려는 태도. 오늘날 위장된 형태들이 결국 1부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어떤 위협이 "진짜"일 때, 오히려 과장하지 않는 게 왜 더 설득력 있을까?
2. 한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 — 어느 쪽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까?

16장. "부정선거였다" — 한국과 미국,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이 책은 "의심스럽다 → 확인한다 → 결론짓는다"는 방법을 계속 써왔다. 이 방법으로 15장(중국의 대한국 선거개입 공작)과 19장(신장 위구르)에서는 "확인해보니 의심이 맞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장은 같은 방법을 똑같이 적용했는데, 결론이 반대로 나온 경우다.



사진: David Maiolo,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미국, 2020년 대선. 소송이 60건 넘게 제기됐고, 공화당·민주당이 임명한 판사들 모두를 포함해 거의 전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조지아주는 500만 표를 전부 손으로 다시 셧고 결과는 그대로였다. 애리조나 매리코파 카운티는 공화당이 직접 의뢰한 "사이버 닌자스"라는 업체가 감사했는데도 결론은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결과를 바꿀 만한 부정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이버보안 담당 국장 크리스 크랩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발표했다가 그 발언 때문에 해임됐다. 다만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에서 한 보안업체가 개표기 오류를 주장하는 예비 보고서를 낸 적은 있는데, 이건 공식 감사에서 뒷받침되지 않은 단일 보고서였다.



이미지: 대한민국 대법원, 공공누리(저작권법 24조의2)

한국,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포렌식 감정까지 거쳐, 2022년 첫 판결(민경욱 전 의원 소송)부터 2023년 마지막 소송까지 전부 "객관적 증거 없음"으로 기각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득표율 차이가 이상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화여대·고려대 통계학 교수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그 정도 차이는 확률적으로 정상 범위였다 — 부정선거 논란이 전혀 없었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는 게 근거였다. 이 논란을 이끌어온 박주현 변호사(21·22대 총선, 21대 대선 무효소송 대리인)의 핵심 근거였던 "4.7초당 한 표" 통계, 접하지 않은 투표용지 등도 법원의 재검표·감정 과정에서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 중 하나로 들며 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이 주장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이어졌다. 외신은 한국의 이 논쟁을 "트럼프의 'Stop the Steal(도둑맞은 선거를 멈춰라)' 구호를 그대로 수입한 것"으로 보도했다. 보수 정치인 이준석은 2026년 2월 보수 매체 펜앤드마이크에서 열린 토론에서 부정선거론자 전한길에게 "언제, 어떤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말해주면 검증하겠다", "팩트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 이건 진보 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보수 진영 안에서도 갈리는 사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넉 달 뒤, 진짜 문제가 터졌다 —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기서부터는 2020년 총선 이야기가 아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14,300개 투표소 중 50곳이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22곳은 한때 투표가 중단됐다. 서울 남부 3개 구에서 특히 심했는데, 선관위 스스로 밝힌 이유는 "조기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에 전체 유권자의 절반 수준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것이었다. 약 2,000표 분량의 용지가 제때 준비되지 못했고, 종료 시각(오후 6시)을 넘겨서까지 줄 서서 기다렸지만 결국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

2026년 6·3 지방선거 — 실제로 확인된 문제

50 / 14,300

투표소 중 투표용지 부족
22곳은 한때 투표 중단

약 50%

선관위가 준비한 용지 비율
(조기투표율 높은 지역 기준)

공식적으로 확인·인정된 것

선관위원장 노태악 사임 표명
이재명 대통령 "극도로 유감" + 책임자 문책 지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선거무효소송 예고
주말 서울 최대 수만 명 항의 집회

정확히 구분할 것

"관리 부실로 투표를 못 하게 한 것"(확인된 사실) ≠
"표를 조작해 결과를 바꾼 것"(2020년 총선 — 법원, 근거 없다고 판결)

이건 "확인 안 됨"도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도 아니다. **선관위원장 노태악이 사임을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극도로 유감"이라 밝히며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했으며, 주말 사이 서울에서 최대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즉 선거 관리 실패로 인해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 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는, 정부·여당·야당·선관위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건 "누군가 몰래 표를 조작해서 결과를 바꿨다"는 의미의 부정선거(개표 조작)와는 다르다 — 확인된 건 "선거를 엉망으로 준비해서 투표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관리 부실이다.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바르지 못한 선거") 넓게 쓴다면 이 사건은 분명 거기 해당한다. 하지만 "개표 결과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미로 쓴다면, 이번 사태는 오히려 그 반대(용지가 모자라서 표를 못 넣은 것이지, 없는 표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에 가깝다. 이 두 가지 "부정선거"를 섞으면 안 된다 — 하나는 확인된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써야 할까? 2020년 총선의 "개표 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조사가 안 됐다"와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다른 문장이고, 이 책이 신뢰해온 검증 방법(법원, 재검표, 통계학자, 여야 양쪽 참관인, 심지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같은 진영에서 나온 조사)을 적용하면 결론은 "증거 없음"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의 "관리 부실로 인한 투표 방해"에 대해서는 다르다 — 이걸 이미 조사됐고, 확인됐고, 책임자가 사임했다.** 두 사건을 같은 "부정선거"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면, 실제로 확인된 심각한 문제(2026년)의 무게가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2020년)에 묻혀버린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 하나를 덧붙인다. 이 책은 지금까지 법원·통계학자·여야 참관인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했다. 그런데 2026년 지방선거처럼 선거 관리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진 사건을 실제로 겪고 나면,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정말 완벽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아직 이 책의 조사 범위 밖에 있다 —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는 대신, 이 의문 자체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2026년 사태로 인해 오히려 더 정당해졌다는 것만 정직하게 밝혀둔다. **확인된 것은 확인됐다고, 아직 확인 안 된 의심은 의심이라고 — 이 둘을 구분해서 갖고 가는 것, 그게 이 책이 배운 태도다.**

"부정선거였다" — 확인해보니, 둘 다 아니었다

미국 · 2020년 대선

소송 60건 이상 → 거의 전부 기각
(공화·민주 임명 판사 모두)
조지아 500만 표 전수 재검표
→ 결과 동일 확인
애리조나: 공화당이 의뢰한
"사이버 닐자스" 감사도 동일 결론

한국 · 2020년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120여 건 제기
2022.7 대법원, 민경욱 소송 기각
"QR코드·조작 주장, 객관적
근거 없다" 명시
2023.8, 3년 만에 소송 전부
"부정선거 증거 없음"으로 종결

이 책의 방법은 편지지 않는다

19장(신장 위구르)과 15장(중국의 선거 개입 공작)에서는
"확인해보니 의심이 맞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장에서는 "확인해보니 의심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왔다 — 같은 방법으로.

단, "조사 결과에 동의 안 한다"와 "조사가 안 됐다"는 다른 이야기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어떤 기관(법원, 선관위, 통계학자)의 조사 결과를 "그 기관도 조작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무엇으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
2.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조사가 안 된 것"을 헷갈리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3. 2026년 지방선거 사태처럼 "확인된 실패"를 겪고 나면, 아직 확인 안 된 다른 의심에 대해서도 더 경계하게 되는 게 당연할까? 그 경계심과, 확인 없이 결론짓는 것 사이의 선은 어디에 있을까?

17장. 호주는 왜 등을 돌렸나 — 친중에서 반중으로

호주는 한때 중국과 가까운 나라였다. 그런데 2016–17년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 2017년 12월 외국영향력투명화법을 만들고, 2018년 8월엔 화웨이·ZTE의 5G 사업 참여를 금지했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2%의 보복 관세를 매겼고, 호주는 2020–21년 AUKUS 안보동맹에 합류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노선을 확정했다.



사진: Thennicke,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이미지: BAE Systems/영국 해군, Wikimedia Commons (OGL v3.0)

호주는 왜 등을 돌렸나



계기는 무엇이었나

호주 정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 자금·영향력 스캔들(정치인 후원금 등)이 터지면서, 총리가 공개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비판.

한 나라의 태도가 바뀌기까지 5년이 걸렸다 — 그 전엔 몰랐거나, 무관심했다.

이 모든 변화의 계기는 호주 정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 자금·영향력 스캔들이었다 — 정치인 후원금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가 드러나면서, 호주 총리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했다. **호주의 태도가 바뀌기까지 5년이 걸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문제가 진짜로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대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의 무관심이 바로 이 책의 여는 글에서 이야기한 "이디오테스"의 자리다.

이 장이 1부와 이어지는 지점은 이거다 — 1부 3장에서 다룬 질문("국가가 신의 자리에 앉을 때 벌어지는 일")은 중국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경 밖의 자유로운 나라에도 자금과 영향력으로 그 힘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호주는 5년이 걸려서야 그걸 알아차리고 대응했다. 분별은 국내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함께 생각해보기

1. 한 나라가 태도를 바꾸는 데 5년이 걸렸다면,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5년째 못 알아차리고 있을 수도 있을까?

18장. 항구를 빌려주고 나라를 내주다 —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의 선례

캄보디아 리암 해군기지는 2019년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 보도했다. 중국이 30년(10년 단위 자동연장)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위성사진으로 대형 군함용 부두가 확인됐으며, 중국 해군 인력 100명이 상시 작업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헌법상 외국군 기지를 둘 수 없다며 공식 부인하고 있다.



사진: Dmitry Makeev,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사진: Dinesh De Alwis,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항구를 빌려주고, 무엇을 내주었나

캄보디아 · 리암 해군기지

2019 WSJ 최초 보도
30년 사용 + 10년 단위 자동연장
위성사진: 대형 군함용 부두 확인
중국 해군 인력 100명 상시 작업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 부인 중

스리랑카 · 함반토타 항구

2017.12, 부채상환 실패로
지분 70% · 99년 임대 양도
최대 198년까지 연장 가능 조항
"부채함정 외교"의 대표 사례로 유명

**단, 최근 운영성과 개선 근거로
반론 기사도 있어 논쟁적**

두 사례의 공통점: 빚, 혹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군사·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 항구 — 그 경계는 늘 흐릿하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는 더 극단적인 사례다. 2017년 12월, 빚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는 항구 지분 70%와 99년 임대권(최대 198년까지 연장 가능)을 중국 자본에 넘겼다. 이걸 "부채함정 외교"의 대표 사례로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다만 정직하게**

밝히자면, 최근 이 항구의 운영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패한 함정이 아니라 성공한 항만 사업이었다"는 반론 기사도 나오고 있다 — 그러니 이 사례는 "이미 결론 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논쟁 중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빛이나 투자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지나며 군사·전략적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1부의 질문이 다시 등장한다. 5장에서 다룬 "청지기직"은 소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전제 위에서, 인간이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다는 개념이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캄보디아와 스리랑카가 항구를 "내준" 방식은, 자원해서 나눈 것과 빛에 떠밀려 넘겨준 것 중 어느 쪽에 가까울까? 이 책 5장에서 구분했던 "자발적 나눔"과 "강요된 몰수"의 경계가, 개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문제로도 똑같이 나타난다.

함께 생각해보기

1. "투자"와 "빛"과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서로 다른 말이 될까?

19장. 국경 너머, 지금 이 순간 — 신장 위구르

이 장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것 중 가장 근거가 강한 사례다. 미국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2년 8월 자체 조사해 발표한 48쪽짜리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장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과 강제노동이 "국제범죄, 특히 반인도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지도: *Das steinerne Herz*,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이 장은 특정 개인의 얼굴 사진 대신 위치 지도만 실는다.

국경 너머, 지금 이 순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2년 8월 보고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확인되었다"

대규모 구금·강제노동 등이 "국제범죄, 특히 반인도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누가 조사했나 — 왜 신뢰도가 높은가

미국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UN 자체 인권 기구가 직접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

강제노동은 "빈곤퇴치 노동이전"이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짐.

중국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계속 부인·거부하고 있음.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것 중 가장 근거가 강한 사례 — 담담하게 읽을 것.

강제노동은 "빈곤퇴치를 위한 노동이전"이라는 이름의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중국 정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 장은 다른 장들과 달리 "논쟁적"이라거나 "인과관계를 조심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다** —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스스로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장은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수사 없이, 담담하게 사실만으로 읽혀야 한다. 진짜 무거운 일 앞에서는 과장이 필요 없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어떤 소식은 자극적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무겁다. 그런 소식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까?
2.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까 (기도, 알기, 나누기 등)?

20장. 몸을 파는 마지막 시장 — 강제 장기적출

이 장은 쓰기가 가장 조심스러운 장이다. 주제 자체가 무겁고, 인터넷에는 근거가 부실한 채로 부풀려진 이야기도 많이 떠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원칙을 지킨다 —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부터 정확히 밝히고 시작한다.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nal, 2019). 유고슬라비아·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에서 밀로셰비치를 기소했던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이 이끈 독립 국제법정이다.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이 증인 심문과 증거 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이 법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중국에서 수감자(주로 파룬궁 수련자, 그리고 위구르족·티베트인·가정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차이나 트리뷰널 (2019) — 독립 국제법정의 결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파룬궁 수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었다

누가 조사했나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이 이끈

독립 국제법정 —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됨

대상: 주로 파룬궁 수련자, 또한 위구르족·티베트인·가정교회 성도

2021년, UN도 "매우 우려된다"고 반응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전문가들이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 "genocide(집단학살)" 단정까지는 아니라고 트리뷰널 스스로 명시함 — 과장 없이 정확히

2021년에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는 공식 반응을 냈다 — 파룬궁 수련자·위구르족·티베트인·기독교인 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적출이 "수년간, 상당한 규모로 이뤄져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였다. 이건 미국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UN 산하 독립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다만 정확히 밝힐 것이 있다. 차이나 트리뷰널도 스스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반인도범죄는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개념인 제노사이드는 증거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어디까지 확신하고 어디부터는 확신하지 못하는지 명시하는 태도 자체가, 이 조사의 신뢰도를 오히려 높여준다. 중국 정부는 이 모든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신장 위구르 장(19장)과 이 장이 함께 보여주는 게 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쓸모(노동력, 심지어 장기)로 환원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 이건 1부 4장에서 다룬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자리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이 장의 근거(독립 국제법정, UN 전문가)와,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카더라" 식 주장은 무엇이 다를까?
2. "여기까지는 확신하지만, 여기부터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밝히는 조사가, 모든 걸 확신한다고 주장하는 조사보다 왜 더 믿을 만할까?

이 장에 실린 모든 사실관계와 출처는 자료조사_현안팩트체크_20260824.md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원고 개정 시 이 파일을 먼저 참고할 것.

4부.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나

3부에서 우리는 열한 개의 사건을 직접 확인했다. 몇 개는 "확인해보니 의심이 맞았다"였고, 몇 개는 "확인해보니 의심이 틀렸다"였다. 이 4부는 결론을 요약하는 장이 아니다 —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장이다.

21장.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는 법 — 이 책이 실제로 쓴 방법 그대로

3부의 열 개 장을 쓰면서 이 책이 실제로 밟은 절차는 이랬다.

이 책이 실제로 밟은 4단계

1

주장을 정확히 적는다

막연히 "위험하다"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구체적 형태로

2

출처를 찾는다

누가 처음 말했는지,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3

다른 방향에서도 확인한다

국내외, 찬성쪽·반대쪽, 정부·민간 — 여러 각도로

4

결론이 없으면 없다고 쓴다

"확인 안 됨" ≠ "확인해보니 아니었다" ≠ "확인해보니 맞았다"

1. **주장을 정확히 적는다.** "제주도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제주 실종신고가 2,914건이고 15명이 미발견이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형태로.
2. **출처를 찾는다.** 그 주장을 처음 한 사람·매체가 누구인지,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3. **다른 방향에서도 확인한다.** 한국 언론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도, 이 정부 발표만이 아니라 저 정부 발표도, 주장하는 쪽만이 아니라 반대쪽 조사 결과도.
4. **결론이 없으면 없다고 쓴다.** "확인 안 됨"과 "확인해보니 아니었다"와 "확인해보니 맞았다"는 전부 다른 결론이고, 이 셋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네 단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건너뛰는 건 3번이다 — 내 생각과 같은 이야기만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걸 보니 사실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믿고 싶은 걸 확인하는 것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최근에 내가 "사실이겠지"라고 믿었던 것 중, 위 4단계를 실제로 거쳐본 게 있을까?
2. 나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뉴스나 채널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22장. "누가 말했는지"보다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지" 물어라

3부에서 다룬 여러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자. 목포MBC 자막 논란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누가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실제 인구통계가 어땠는가"였다. 왕후닝 얘기에서 중요했던 건 "그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로 그려지는가"가 아니라 "그가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가"였다. 부정선거 논쟁에서 중요했던 건 "누가 더 확신에 차서 말하는가"가 아니라 "법원과 통계학자가 무엇을 발견했는가"였다.

사람은 확신에 찬 목소리를 신뢰의 증거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확신은 증거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100% 확신하며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 반대로, "잘 모르겠다,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한 경우가 많다.

다음번에 누군가(유튜버든, 정치인이든, 심지어 목사님이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장할 때, 이렇게 물어보자 — "그래서 근거가 뭐야?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이나 출처가 있어?"

함께 생각해보기

1. 내가 평소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23장. 무관심이 아니라 분별 — 미워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법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 신장 위구르의 고통받는 사람들, 북한의 지하 성도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까지, 이 책이 반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분별력을 기른다는 게 냉소적이거나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위험한 두 극단이 있다. 하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모든 뉴스를 그대로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어떤 기관, 어떤 증거도 믿지 않고 "다 조작됐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이 책이 3부에서 계속 보여준 건 세 번째 길이다 —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고, 결론이 바뀌면 기꺼이 바꾸는 것.**

이건 성경적으로도 낯선 태도가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한다. 무조건 믿지도, 무조건 의심하지도 말고 — 헤아리라는 것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1. 내가 어떤 뉴스나 주장에 화가 날 때, 그 화가 "확인된 사실에 대한 정당한 분노"인지 "확인 안 된 것에 대한 반사적 반응"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까?

24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 투표 못 하는 나이에도 시민으로 사는 법

투표 못 하는 나이에도, 오늘부터

- ☐ 오늘 읽은 뉴스 하나, 원문까지 확인해보기
- ☐ 나와 다른 입장의 글 한 편 읽어보기
- ☐ "왜 그렇게 생각해?"를 먼저 물어보는 대화
- ☐ 국경 너머 고통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 ☐ 투표할 나이를 미리 준비 — 공약·이력 찾아보는 연습

시민이 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오늘 본 뉴스 하나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투표권이 없어도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많다.

1. **오늘 읽은 뉴스 하나를 원문까지 확인해보기.**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고, 실제 기사나 발표 원문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습관.
2.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나와 다른 입장의 글을 한 편 읽어보기.**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3. **가족·친구와 정치·시사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게 생각해?"를 먼저 물어보기.** 논쟁이 아니라 대화로.
4. **국경 너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막연히 "세계 평화"가 아니라, 이 책에서 읽은 구체적인 사람들 — 신장의 위구르인, 북한의 지하 성도들 — 을 떠올리며.
5. **투표할 나이가 됐을 때를 미리 준비하기.** 후보의 SNS 문구가 아니라 실제 공약과 이력을 찾아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연습하기.

한 문장으로: 시민이 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다. 오늘 본 뉴스 하나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함께 생각해보기

1. 이 다섯 가지 중 이번 주 안에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맺는 글 — 다시, 그 문장으로

여는 글로 돌아가 보자. "이디오테스"라는 단어와, 소크라테스의 것으로 잘못 알려진 그 문장. 이제는 이 두 이야기의 진짜 출처를 안다 — 이디오테스는 원래 경멸의 말이 아니었고, 그 유명한 문장은 플라톤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힘이 있다. 공적인 삶에 무관심한 자리는, 누군가는 반드시 채운다.

이 책에서 다룬 CBDC도, 안면인식도, 로봇청소기도, 목포MBC도, 제주도도, 부정선거 논쟁도, 호주도, 캄보디아·스리랑카도, 신장 위구르도, 강제 장기적출도 — 결론은 한 방향으로만 나지 않았다. 어떤 건 확인해보니 의심이 맞았고, 어떤 건 확인해보니 의심이 틀렸다. 이 책이 자랑스러워할 게 있다면,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책이 진짜로 가르치고 싶었던 건 결론이 아니라 **태도**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분별로, 확신이 아니라 확인으로 — 이 세 가지 전환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이웃이다. 이 책이 너에게 분별력과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의 말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기까지 이 책에 실린 사실관계는 전부 출처를 확인한 팩트만 담으려 했다. 이 마지막 장만은 다르다. 여기서부터는 저자 개인의 신념과 우려를 있는 그대로 밝힌다. 앞의 모든 장과 분리해서, 저자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읽어주기 바란다.

나라가 공산화되어간다는 것은,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마음껏 누려온 예배의 자유가 통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가 머지않은 그날을 너무나 태평하게,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 외면의 흔적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세우는 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조차 "독재자"라는 프레임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이 프레임의 뿌리 중 하나가 북한이 오랫동안 벌여온 "이승만 지우기" 공작이라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 무게가 얼마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는지, 최근의 두 사건이 나란히 보여준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반면 **대구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1심 판결은 10월 1일 예정).** 하나는 시비조차 걸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다른 하나는 존폐를 다투는 법정에서 있다. 이 대비 앞에서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 우리가 우리 자신의 뿌리는 이토록 쉽게 지우려 하면서, 다른 나라의 흔적은 이토록 태연히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 책 곳곳에서 다룬 사건들 이면에는 하나의 공격이 흐르고 있다고 나는 본다. 그 공격이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할 날을 맞을지도 모른다.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과연 그날 우리는 예배를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라는 우상숭배가 중국이라는 배를 타고 한반도에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터전을 지키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심각성을 함께 알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

나는 처절하고 울부짖는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 이 책의 본문은 최대한 공정하게, 기능론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가르치려 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외침만큼은, 잠들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깨우고 싶은 저자 한 사람의 간절한 열망이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